

제멋대로 요금받는 광주 공영주차장들

요금체계 무시 '바가지'도 일쑤...시민들만 애꿎은 피해 지자체들 허술한 관리·감독에 위탁운영업체 위법 방지

■ 지난 22일 이모(30)씨는 광주 시 북구청 앞 용봉천 인근 공영주차장(75면)에 차량을 1시간 20분 주차한 뒤 1500원을 냈다. 이 주차장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3급지에 해당해 1시간 20분의 경우 900원만 내면 되지만 요금 징수원은 1500원을 고스란히 받았다.

■ 광주시 북구 오치동 북부소방서 옆 공영주차장(68면)의 경우 같은 3급지지만 요금 징수원은 "2시간까지 600원만 받겠다"며 차량주인과 주차비를 흥정했다.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이 이처럼 기준 없이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도 관리 감독은 커녕, 위탁업체에 떠넘기면서 시민들만 바가지 요금 등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3월 현재 광주지역 642개 공영주차장 중 유료로 운영되는 45개(6238면) 주차장이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기본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와 각 지자체가 '주민 편의'를 위해 부지를 매입, 조성했음에도 위탁업체 임의대로 요금을 책정, 일부 이용객이 많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민들이 '바가지 요금'을 내고 있

는 형편이다. 위탁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 투입된 비용 및 운영비 등을 만회하기 위해 조례보다 높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몫을 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조례에 따른 기본 요금은 30분에 300원, 15분 추가할 경우 150원으로 책정됐지만 협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2배 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주차장 위탁 운영업체들이

100면 기준으로 4000만~1억을 넘는 위탁료를 내고 운영권을 따는 만큼 수익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반면, 이용 차량이 많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손납'이 없어 '올며 겨자먹기'로 돈을 적게 받더라도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들은 인력

부족과 공영주차장 위치별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공영주차장 요금과 운영 방안을 개선키로 했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된 뒤 탄력 요금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공중전화 부스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

26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2014 볼런티어 액션 1day' 선포식 및 봄맞이 시가지 청결 활동에 참가한 북구지역 자원봉사자들이 공중전화 부스를 청소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민이 연간 1회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포의 민원인'

광주서 한명이 5년간 1200건 제기...심한 욕설도

"아×××아, 일 처리 똑바로 안해."
"광주시청 감사실에 연락할테니, 알아서 해."

광주에 사는 한 남성이 '120 빛고을콜센터' 직원과의 통화 내용 중 한 대목이다. 120 빛고을콜센터는 시청 민원에 대한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상담해주는 콜센터다.

이 남성은 120 빛고을콜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틈만나면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독촉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모두 1200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루평균 0.7통의 전화를 건 셈이다. 이 남성이 제기한 민원은 주로 120 빛고을콜센터 위치나 버스노선 및 도착시간 등을 알려달라는 다소 사소한 내용이였다.

이 남성은 120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최대한 악용(惡用)해 민원을 제기한 뒤 처리 결과가 통보 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로 항의했다. 심지어 화물인성 욕설도 서슴치 않았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그의 민원을 처리하는 120 직원들은 다른 업무에 손을 못 댈 지경이었다.

120 직원들 사이에서 이 민원인이 '공포의 대상'이라면, 시청 홈페이지 등 전자민원계의 악성 민원인은 '백 *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 민원인은 지난 2005년 1월~지난해 12월까지 525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조 * *(336건) ▲'송 * *(260건) 등이다.

백씨와 송씨는 주로 매년 신고를, 조씨는 차량·불법주차물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120 빛고을콜센터 관계자는 "무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한 욕설을 한다. 마치 개인 비서를 두고 일을 시키는 느낌"이라며 "아직까지 고소·고발은 하지 못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자민원(6만 7930건·8년)·120(63만 2696건·4년 9개월)·SNS(1524만 8722건·10년) 등에 대한 시민의 소리(민원)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분석기관은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반복 민원에 대해선 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커피숍 운영권 주겠다"

1억 가로챈 50대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광주 지역 H 신문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9월 지인인 이모(38·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쟁

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커피 프랜차이즈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며 신축 중인 커피숍 운영권과 수익금 30%를 지분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속인 사실도 밝혀졌다.

김씨는 이씨가 속은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개인적 약점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윤기자 dok2000@

스마트폰 채팅으로 처음 만난 날 성폭행한 고교생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동갑내기 여 자친구를 흥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무서운 10대 청소년이 검찰행.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서모(17·광주 모 교고 3년)군은 지난 13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

가동 A(여·17)양 집 거실에서 A양을 흥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는데, 경찰에서 서군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짧은 바지를 입은 A양을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했다"며 뒤늦은 후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매매 가능해지나

대법원 판결 후 광주지법도 어린이집 양도 무죄 선고 관련 사건 줄줄이 계류 관심...공공성 훼손 우려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관련,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용도로 법인 재산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운영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은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판단과 같

은 취지의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돈을 주고 인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광주에서 진행된 첫 판결인 점, 광주지법에 유사한 사건이 줄줄이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26일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및 대표이사 선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모(56)씨와 양모(여·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 운영권의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운영권을 양도하고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청탁'을 받았더라도 법인 존립에 위협을 초래할 기본 재산의 침해가 없고 양수인

측이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용도로 법인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기초, 어린이집 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재)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여·44)씨와 임모(여·5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광주지법에 줄줄이 계류돼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2건의 유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4일 같은 재판부에서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현재 광주지법의 파기환송심 5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워터, 쥬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형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형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은행 옆 푸레쥬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